

## 〈성명서〉

# 대선후보들은 서민의 법조계 진입 보장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하라.

사법시험의 폐지와 로스쿨의 도입은 ‘능력사회’에서 ‘신분사회’로의 변질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외치며 서민과 청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교육 양극화의 시발점인 로스쿨 등록금 문제와 이로 인한 서민의 법조계 진입 차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 지금도 가정 형편 때문에 로스쿨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하나 둘 씩 법조인의 꿈을 접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의 2012년도 연평균 등록금은 약 670만원이었는데, 2011년 기준 로스쿨의 “한 학기당” 평균 등록금은 1,486만원이었다.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 서울시립대는 연간 등록금을 476만원으로 낮춰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지만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1,046만원으로서 요지부동이다. 일부 로스쿨은 연평균 등록금이 2,000만원을 넘어섰다. 연평균 670만원의 등록금도 버거워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오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로스쿨이 진학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로스쿨은 소위 ‘스펙’과 외국어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입학전형부터 부유층 혹은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에게 유리하고 서민층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심지어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반드시 보아야 하는 법학적성시험의 응시료는 27만원으로서 사법시험 응시료(5만원)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결국 로스쿨 입학 자체가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높은 진입장벽이다.

현재에도 로스쿨은 전문직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2017년에 폐지되어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게 되면 로스쿨 측은 대학자율권을 내세워 더욱 인상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서민의 법조계 진입은 영원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법조인의 필수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때문에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특히 판·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상황에서의 로스쿨 제도는 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역시 2009년 4월 변호사시험법을 의결하면서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2013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말로는 ‘서민’을 외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침묵은 아예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특권층의 이익을 비호하기 위해 문제를 애써 외면하기 때문인가?

우리 청년변호사들은 로스쿨 문제가 단지 법조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순이 투영된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로스쿨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책무이다. 이에 우리 청년변호사들은 서민의 법조계 진입 보장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사항>

첫째, 서민의 법조계 진입보장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 하라.

둘째, 대선후보들은 서민의 법조계 진입 보장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라.

셋째, 국회는 2013년 예비시험의 도입을 다시 논의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